



2022. 9.

국회예산정책처 | 연차보고서

2021 NABO 연차보고서

2021 NABO Annual Report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목차

I. 기관소개

• 국회예산정책처	04
• 업무추진 기본방향	05
• 연혁	06
• 조직 및 예산	08

II. 주요 성과 및 활동

•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	13
•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4
•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	15
• 202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17
•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및 확대	18
•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21
• NABO 소식	22

III. 연구·분석보고서

• 국가재정체계안내서	27
• 예·결산 분석	32
• 재정사업 분석	35
•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44
• 조세 분석 및 연구	47
• 경제현안 및 전망	51

IV. 정기간행물

• NABO Focus	62
• NABO 재정동향&이슈	63
• NABO 추계&세제 이슈	64
•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65
• 예산춘추	68
• 예산정책연구	69

V. 법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회답

• 법안비용추계 현황	72
•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73

Chapter

I



기관 소개

- 국회예산정책처
- 업무추진 기본방향
- 연혁
- 조직 및 예산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설립 근거 및 목적

「국회법」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예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부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존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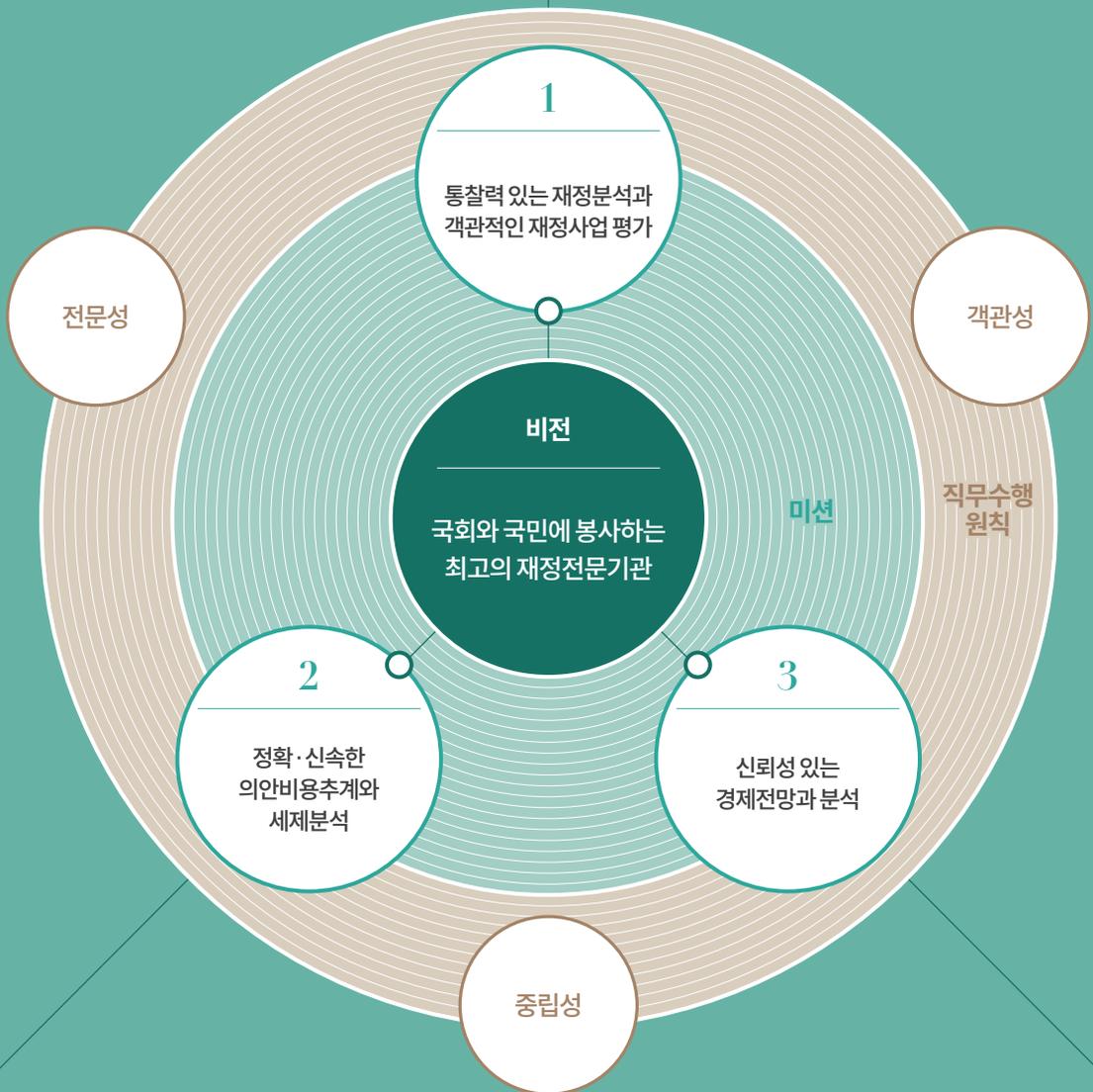
국가재정
연구·분석·평가



입법부의
재정전문기관

업무추진 기본방향

General Direction of
Our Work



연혁

Timeline

2003.1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03년 10월 설립 이후
예결산 분석을 실시하여
국회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안과 결산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에 기여



2012.6. 장기 재정전망 실시

향후 30년 이상의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 국내 최초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부담에 대하여 분석



2004.8. 거시경제 전망 실시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경제전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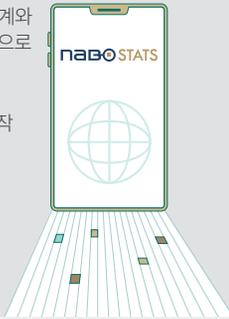
2015.3. 국회예산정책처로 의안비용추계 일원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전담하고,
위원회 대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공



2018.9.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
서비스 개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통계와 경제통계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 서비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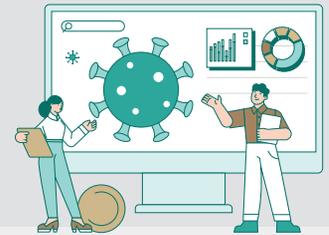


2018

2019

2020.8.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발간

한국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인구구조·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전략 검토



2020

2020
~2021

2019.11.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실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에 대한 수입·지출과 국가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향후 10년 간의 전망을 실시하여 사회 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점검



2020~2021
코로나19 대응·회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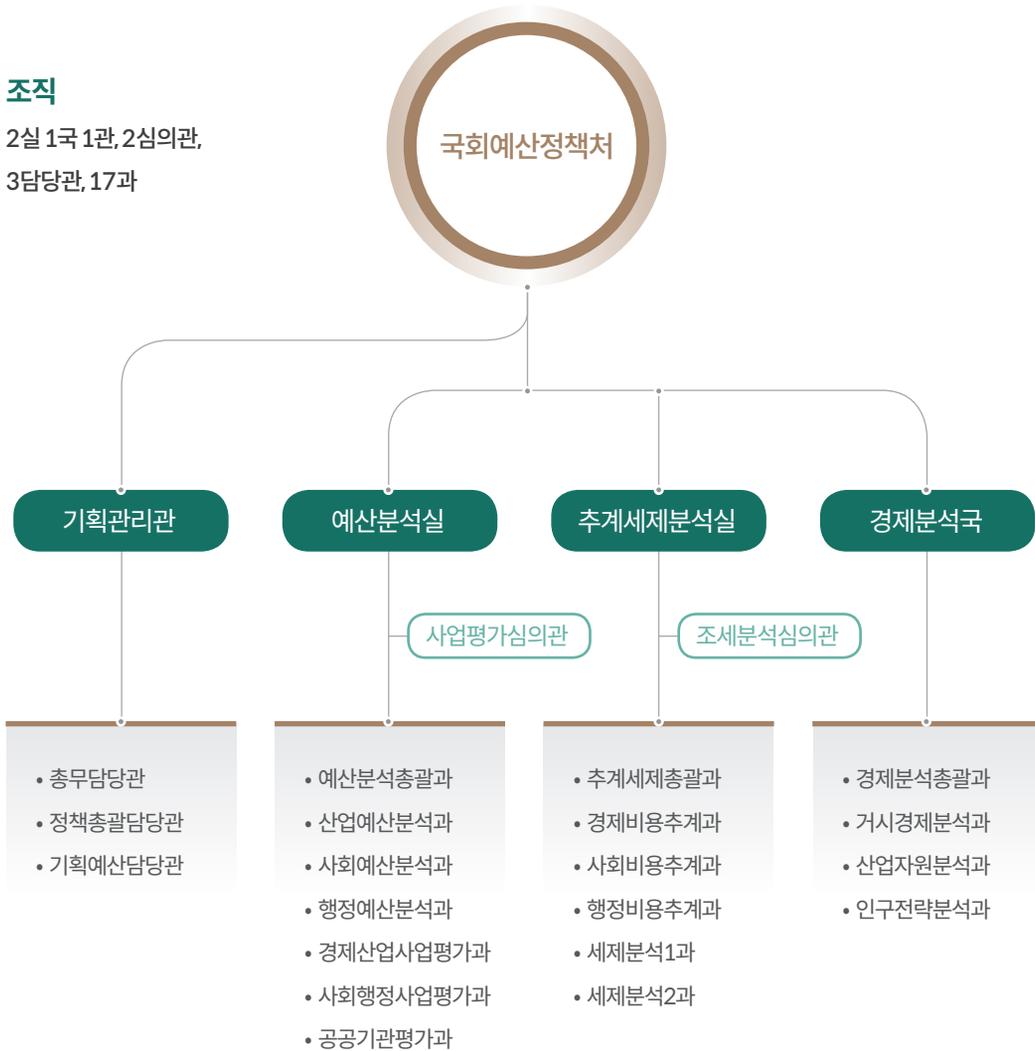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적시적으로 실시(2020년 총4회, 2021년 총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조직 및 예산

Organization and Budget

조직

2실 1국 1관, 2심의관,
3담당관, 17과



인력

직제상 정원: 138명(분석·연구부서 111명, 행정지원 업무부서 24명)

현원: 130명

2021.12.31.기준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과부족
처장실	3	3	-
기획관리관실	24	24	-
예산분석실	51	49	△2
추계세제분석실	38	33	△5
경제분석국	22	21	△1
합계	138	130	△8



분석·연구부서

111명



행정지원 업무부서

24명



정원 외 인원

47명

정원 외 인원: 47명

2021.12.31.기준

(단위: 명)

구분	인원	비고
전문임기제	8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행정실무원	28	행정업무 지원
영문에디터	1	국제회의 통번역, 영문 보도자료 작성 등 대외협력 업무
자료분석지원요원(RA)	10	자료·정보의 수집과 업무보조
합계	47	

예산

2021.12.31.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예산액 (본예산 기준)	2021 집행액
인건비	13,720	12,069
기분경비	2,626	2,399
주요사업비	5,218	4,136
합계	21,564	18,604



2021 집행액

186억원

Chapter

III



주요 성과 및 활동

-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
-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
- 202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및 확대
-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 NABO 소식

2021 NABO 주요실적

NABO 보고서
발간 실적



연 114권

언론보도
실적



연 4,512건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전반적
만족도 3.3점 상승

○ 2020 ● 2021 (단위: 만족도[점])



이외에 홈페이지, 이메일링 서비스,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등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상승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원칙 및 방향 논의

일자 2021. 10. 20.

장소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
(비대면 화상회의)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개회사와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토론회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소상공인 지원 및 보상에 의한 포용적 상생, 새로운 도약의 견인으로서 재정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량적 측면에서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출효율화 및 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및 재도약 지원, 탄소중립경제,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정책별 예산안의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 발표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 정의당 강은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심사 방향과 중점 심사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 재정운용 및 재정의 역할 등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

일자 2021. 11. 1.
장소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
(비대면 화상회의)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개회식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는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 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방향이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021년 세법개정안은 투자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개편으로 평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인구고령화·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용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모색

일자 2021. 7. 13.

장소 여의도 컨싱턴 호텔
15층 센트럴 파크룸
(비대면 화상회의)

-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사회자 및 발제자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 및 청중 없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최소한의 출입 인원에는 대해서는 발열체크, 손 소독, 개별 마이크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 심포지엄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영상 축하,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발제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변화와 바람직한 예산의 조건’에 대해 발표하고, 첫 번째 세션인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재정운용, 의회의 역할과 제도’, 두 번째 세션인 ‘국회의 예산제도와 NABO의 역할’이 연이어 진행됐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재정운용, 의회의 역할과 제도”라는 의제 아래 세계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의회 역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토론했다. 먼저 존 블론달(Jón R.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장이 ‘예산 과정에서 의회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에 대해 발표한 후, 필립 스웨글(Phillip



L. Swagel) 미국 의회예산처(CBO) 처장이 ‘CBO의 미 의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재정운용, 국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발제자 및 청중과 플로어 토론을 활발하게 펼쳤다. 두 번째 세션은 “국회의 예산제도와 NABO의 역할”을 의제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국회 예산심사’,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법안비용추계와 tap다운식 예산안 심의과정’,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재정지출 효율화 체계 수립과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그외에도 브라질,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등 다양한 국외 재정·경제분야 기관 과 연구자 등이 화상으로 참여해 유익한 정보와 우호를 교류하는 장이 됐다.



202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발전 방향 및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 등 논의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에 의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월에는 서면자문으로 실국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2월에는 2021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안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8월에는 제9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 방향 및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예산분석, 추계세제분석, 경제분석)를 통해 주요 연구분야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내용

구분	회의 및 자문 안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NABO가 재정지원활동 등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 또는 조직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안 - 국회예산정책처 발전 방향 및 독립재정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제언 • 각 실국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천 및 개선방안 • 재정·경제 관련 주요 화두와 관련 견해 • 2021년 세계 및 한국경제전망, 재정·경제 이슈에 대한 의견
예산분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결산분석시리즈, 재정체계안내서 개선사항 • 인구구조, 산업구조, 기후 변화 등 재정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 논의
추계세제분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관련하여 자문
경제분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논의 • 최근 경제여건과 2022년 경제전망 등에 관한 의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전공분야와 관련한 예산 및 정책(제도) 등에 관한 의견 •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및 확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화상면담

일자 2021. 1. 20.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임익상 처장은 ‘장기 재정전망’과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4차례 추경예산을 비롯한 예·결산 분석보고서 등 2020년 주요 실적을 소개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면담은 쓰구오(Si Guo) 아태국 이코노미스트 등 IMF 연례협의단과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및 분석관들이 참석하여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준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단 화상면담

일자 2021. 2. 16.



국회예산정책처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연례협의단과 한국 경제동향 및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AMRO 수석연구원 수미오 이시카와(Sumio Ishikawa) 단장을 포함한 6명의 연례협의단이 참여하여,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이강구·박연서·김윤희 분석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방지 및 회복지원을 위한 정책, 재정건전성 및 장기 재정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 화상면담

일자 2021. 3. 26.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2019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한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등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진 팡(Gene Fang)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대표 등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및 분석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의 지속가능성, 한국판 뉴딜의 재정적 효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상호 협력 확인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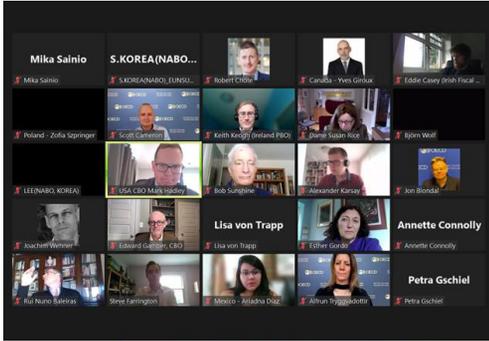
일자 2021. 10. 27. 장소 국회의정관 505호 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상호 협력을 위한 확인서를 체결했다. 협력 확인서 체결에 앞서 임익상 처장은 존 블론달(Jón R. Blö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과 양 기관의 업무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독립재정기구(IFIs) 및 의회예산기구(PBO)의 역할,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상호 협력 확인서는 양 기관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연구인력 상호 교류 확대,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13회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 화상회의

일자 2021. 11. 5.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3회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IFIs,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주최 측인 OECD에서는 OECD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인 마크 해들리(Mark Hadley) 미국 의회예산처 최고 운영책임관과 존 블론달(Jón R. Blöndal) 예산·공공지출국장, 스코트 캐머런(Scott Cameron) 정책분석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 일본 등 각국의 독립재정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약 1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OECD에서 아일랜드, 핀란드, 라트비아의 독립재정기구를 평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공유했다. 제2세션에서는 독립재정기구의 거시경제 전망 정확도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전망 등 주요 활동과 관련된 역량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두되는 주요 재정현안을 효과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 재정경제부 직원 면담

일자 2021. 12. 1. 장소 국회의정관 505호 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재정경제부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사르완 이스마엘 아흐메드 갈리(Sarwen Ismael Ahmed Galali) 단장 등 7명의 KRG 대표단과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안수지·박선아 분석관 등이 참여해 한국의 예산제도 및 국회 예산과정에서 처의 역할, 건강보험의 구조와 재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

-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www.nabostats.go.kr)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경제와 관련된 주요 통계 및 분석들을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이다. NABOSTATS는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재정·경제 지표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정리·재구성한 위원회별 통계,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한 예·결산 심사연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8년 515건으로 시작된 NABOSTATS는 제공하는 재정·경제 지표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여 2021년 651건의 통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의 신속한 최신화가 가능하도록 OPEN-API를 활용한 자동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99건이었던 연동 건수는 2021년 268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NABOSTATS는 통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시각화 방식과 분석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NABOSTATS 통계 유형 및 주요 내용

유형	주요 구성 내용	통계수
재정통계	세입세출통계, 분야별·유형별 예산, 예산과정	66
조세통계	국세, 지방세, 국제조세 및 조세특례	33
지방재정	지방재정 구조, 지역별 지방재정 여건	13
공공기관 통계	공공기관의 지정현황, 인력현황, 재무현황	14
경제통계	국민계정, 산업 및 고용, 대외경제, 물가·통화	39
인구·사회통계	인구 수 및 인구 추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	29
위원회별 통계	상임위원회 재정현황, 주요 정책 통계	336
북한통계	남북한 경제협력·교류, 남북비교, 북한 인구·경제 등	98
국제통계	OECD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등	18
예·결산 심사연혁	예산 수정내역, 예산부대의견,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등	5
합계		651

NABO 소식

2021년도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일자 2021. 1. 25. 장소 국회 접견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소속기관들과 함께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중장기 어젠다 선도 및 미래전략 수립 지원’ ‘재정·경제 분야 의정활동 지원 고도화’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을 업무추진 방향으로 하여 소의 우직한 한 걸음처럼 꾸준하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읽어주는 NABO 보고서 설명회

제1차 3. 30.~4. 1. 제2차 4. 14.~4. 15. 제3차 11. 12.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재정 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의원보좌직원 및 국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읽어주는 NABO 보고서’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을 받은 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제1차는 ‘국가재정의 이해’, ‘주요 재정제도’, ‘대한민국 공공기관’, 제2차는 ‘2021년 국내 경제전망’과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별 인구추계’, 제3차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총량 분석’, ‘주요 정책별 분석 I-III’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설립 18주년 비대면 기념식

일자 2021. 10. 19.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18주년을 맞아 비대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임익상 처장은 기념사에서 “18주년을 청년을 넘어 성년이 되어가는 시기로, 최고의 Think Tank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전문성·중립성·객관성의 원칙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NABO SNS 대학(원)생 서포터즈

기간 2021. 8~1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10명의 NABO SNS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4개월간 NABO의 주요 업무 및 예·결산 분석보고서 소개, 2022년 예산안 및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NABO 알리기에 적극 참여했다. 활동을 마친 서포터즈에게는 국회예산정책처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 서포터즈(1명)와 우수 서포터즈(2명)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SNS 대학(원)생 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 모집인원 2021. 6. 7(월) ~ 6. 20(일) (10명)

모집대상 재장 경제 분야에 관심이 높은 대학교(대학원) 재/휴학생
※산발 완료 후 재학생명서 제출

- 개인 SNS 계정 또는 재장 경제 관련 연구동아리 등 단체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월 2회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자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편집, 일러스트 등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자
- 휴대전화: 유선 연락처(서포터즈, 기자단 등) 보유

활동기간 2021년 8월 ~ 12월(4개월)

지원방법 - 지원서 1부 이메일 접수(pmopr@assembly.go.kr)
※ 지원서 양식은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다운로드
지원서 제출 및 파일 제목: 서포터즈 지원.이름 (예) 서포터즈 지원.김나보

활동내용 - 발대식 및 수료식 참석
- 월 1회 정기회의 참석(이대면)
- 월 2회 NABO 및 재장 경제관련 콘텐츠 기획 및 제작(필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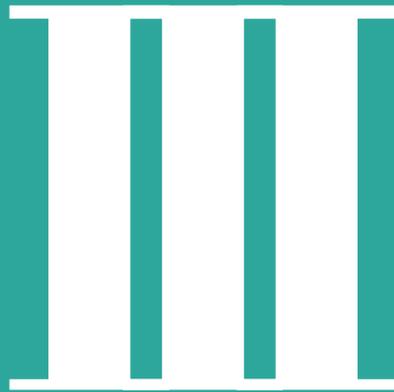
활동혜택 - 소정의 콘텐츠 제작비 지급
- 국회예산정책처장 명의의 위촉장 및 수료증 발급

선발방법 & 결과발표 - 서류심사
- 2021. 7. 23(금) 발표 (※변경가능)
- NABO 홈페이지 공지 및 선발자 개별통지

문의 02-6788-4619 / pmopr@assembly.go.kr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Chapter



연구·분석 보고서

- 국가재정체계안내서
- 예·결산 분석
- 재정사업 분석
-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 조세분석 및 연구
- 경제현안 및 전망

2021 NABO 주요실적

NABO 보고서를 활용한
예·결산안 국회심사
반영실적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오차율(최근 5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국가재정체계안내서

2021 대한민국 재정



발간일 2021. 3. 19.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지난 2020년 12월 국회는 총수입 482.6조원, 총지출 558.0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했다. 본예산이 집행된 지 2개월이 지난 3월 4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 등을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965.9조원으로 GDP 대비 48.2%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에 비하여 13.5조원 만큼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World Bank는 올해 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침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소비와 고용부진으로 경기회복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결산 심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신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은 총 3부 27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 과정, 연기금투자폴, 국유재산 등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서술을 신설하고 재정 과정별로 재정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강했다. 제2부에서는 2021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을 다루고 있고, 제3부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의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정리했다.

재정의 3대 기능



국가재정체계안내서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일 2021. 3. 18.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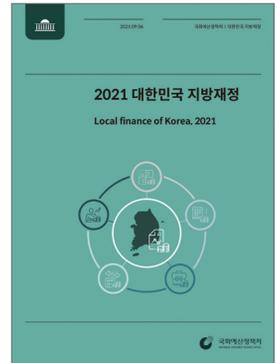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수록한 「경제·재정수첩」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복잡한 경제·사회 현상의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서, 「2021 경제·재정수첩」은 신뢰할 수 있는 재정·경제 통계를 법안 및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2021 경제·재정수첩」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경제통계’에는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지역내총생산(GRDP), 주요 고용지표 등 거시경제 통계를, 제2부 ‘재정통계’에는 세입세출예산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수록했으며, 제3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규모와 주요 제도·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국가재정체계안내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일 2021. 3. 19.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본 보고서는 당해연도 지방재정 현황 및 이슈 반영을 통한 예·결산 심사의 효과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아울러 지방재정에 대한 해설서로서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불균형 및 해소방안에 관심이 있는 주요 고객의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총 3부(‘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1년 예산 및 2020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이행결과 및 2단계 추진방안 등 주요 지방재정 관련 변화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법령 제·개정 내역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에서는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등 현황 및 지방재정 통합자립도 등 주요 재정지표를 해당 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 1단계 이행결과 및 2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전환사업과 자원 내역을 서술하는 등 재정분권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에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운영원칙, 지방재정에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개정내역 분석 및 2020년 재정진단결과를 정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정 내역 및 최근 5년간 추이분석, 주요국의 지방재정관리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에서는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조정제도와,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 및 변경 내역을 재정리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자체별 자체재난지원금 내역 및 특징을 본문으로 추가했다.

국가재정체계안내서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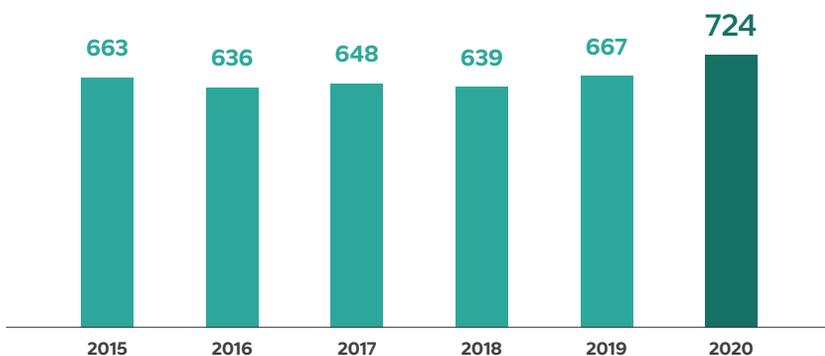


발간일 2021. 3. 18.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자, 출연 등 지원을 받는 정부지원예산과 자체예산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2021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50개이다.
-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예산 기준 724조 5,716억원 규모로 2019년 결산 기준 667조 1,961억원 대비 57조 3,7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2020년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정부 본예산 558조원보다 166조원이 더 많아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정·수입 및 지출·인력·인건비 등 공공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 결산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출자를 검토한 후 공공기관의 유형(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금융공공기관)에 따라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관리정책과 경영평가 등 관리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를 살펴보았다.
- 본 보고서는 각 주제와 항목에 맞는 제도와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특징과 체계를 살펴보고 개별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일반 현황, 재무구조, 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2015~2020)

(단위: 조원)



국가재정체계안내서

2021 대한민국 조세

발간일 2021. 6. 24.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조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자원 조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경기안정과 같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경제의 역동성 회복,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원마련, 소득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조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보고서의 일환으로 「2020년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한 후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해설서로서 조세의 일반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세목별 과세개요와 국제비교를 포함한 관련 주요 통계를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2021년 세법개정 사항을 함께 수록하여 최근 제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본 보고서는 조세의 이해, 국세, 지방세, 조세지출까지 총 4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조세의 일반론과 함께 우리나라 조세법 체계 및 과세요건, 조세수입 현황 등을 수록했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각 세목별 개요, 과세요건 및 세액 계산,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제4부에서는 조세지출의 의의, 유형, 예산제도, 관리제도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 현황을 제시했다.

2021 조세수첩

발간일 2021. 6. 24.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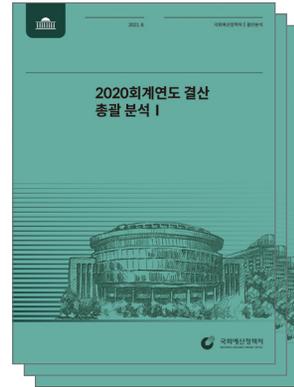
- 「2021 조세수첩」은 조세개요, 국세, 지방세, 조세지출 등 총 4부로 본문을 구성하고,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와 조세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제1부 조세개요에서는 조세체계, 조세의 분류, 조세체계의 변천, 조세수입, 조세부담률 등 기본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구조 등에 대한 국제비교를 분석·정리했다. 제2부와 제3부 국세와 지방세에서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 및 국내외 현황, 최근 개정 동향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제4부 조세지출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현황과 2021년 일몰도래 항목을 정리하여 조세 관련 입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예·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일 2021. 8. 1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 정부가 2021년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총수입은 478.8조원, 총지출은 549.9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57.5조원이 악화되어 11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성장산업 지원 사업,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 재난지원금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했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과정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2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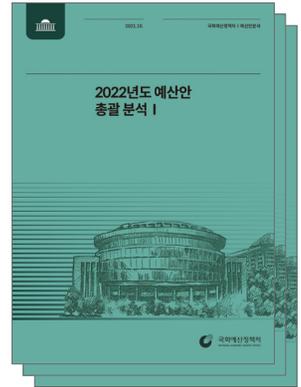
보고서명	주요 내용
결산 총괄 분석(2권)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재정총괄 분석, 주요 정책과제 및 집행유형별 분석
위원회별 분석(13권)	2020회계연도 기준 16개 상임위원회별(정보위원회 제외)로 소관 부처의 주요 현안 및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 의견 제시
공공기관 결산 분석(3권)	정부 결산 외 350개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심층 분석
총수입 결산 분석(1권)	2020회계연도 결산의 수입 측면에 대한 집중 분석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1권)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 중 이행 미흡 사례 집중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1권)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대하여 성인지 성과목표와 양성평등 효과, 대상사업의 필요성 분석

예·결산 분석

202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일 2021. 10. 27.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 정부는 2021년 9월 3일 총수입 548.8조원, 총지출 60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총지출을 전년 본예산 대비 46.4조원(8.3%)을 증액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사업의 효과와 함께 전략적 자원 배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할 국회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총괄 분석」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안을 각 공공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19권)

보고서명	주요내용
예산안 총괄 분석(2권)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재정총괄 분석, 주요 정책과제 및 집행유형별 분석
위원회별 분석(12권)	2022년도 예산안 기준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3권)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수치차보전기관 예산안 분석 등 중점분석과 각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분석하는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
총수입 예산안 분석(1권)	2022년도 예산안의 수입 측면에 대한 집중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1권)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성인지 성과목표와 양성평등 효과, 대상사업의 필요성 분석

예·결산 분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 3. 8.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 정부는 2021년 3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5조원 규모이며,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는 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8.1조원 ② 일자리 창출 등 긴급 고용대책에 2.8조원 ③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 4.1조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특별회계 세 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국채발행 9.9조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재정건전성·경제여건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했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필요성·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 7. 13.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 정부는 2021년 7월 2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증액은 33조원 규모이며,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13.4조원 ② 백신 개발·구매·접종과 손실보상 등 방역 보강에 4.4조원 ③ 고용 조기 회복과 청년·문화업계·취약계층 등 지원에 2.6조원 ④ 지역상권·농어가 지원과 지방재정 보강에 12.6조원이 각각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추가세수 31.5조원, 2020년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활용 등 1.8조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재정건전성·경제여건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필요성·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했다.

재정사업 분석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발 간 일 2021. 2. 26.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로 보호대상아동 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인구 1,000명당 보호대상 아동 발생 수는 2015년 이후 약 0.6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발생률이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5.),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20. 7.) 등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발생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수립한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지원 체계와 관련 재정사업을 분석했다. 분석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수행되는 아동보호 사업은 사업수행부처와 재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상이하여 시의성 있는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업수행부처를 중심으로 재원을 통합하여 필요시 정책 수요에 맞게 아동보호 시설·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인프라 수준에 지역별로 격차가 확인되므로, 정부는 지역별 적정 수준의 인프라 수준을 파악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에 의한 학대·재학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대행위자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제공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범죄 발생 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여부 및 자립지원 평가 여부 등이 상이하고,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관련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체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분석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발간일 2021. 2. 26.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정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산정 체계 및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의 주요 내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배분 및 사업 조정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국가는 국가 사무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국고보조사업의 대상과 국가-지방간 자원분담의 원칙이 부재하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조정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지방간 재정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역할 배분을 위한 조정 원칙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재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편성에서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하고, 사회보장 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지방비 소요 정보가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응지방비를 중·장기적으로 추계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기준보조율의 체계성이 미흡하며, 차등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준보조율에 대한 산정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업별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보조율은 체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차등보조율의 산정에 사용되는 재정자주도 구간은 변별력이 없으며, 사회복지비 지수의 미세한 차이가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있어 정책수요보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비 규모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준보조율의 사업별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차등보조율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력과 사업 수요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분석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발 간 일 2021. 3. 16.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농촌태양광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2016)」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 등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중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설정한 농촌태양광 보급 목표 대비 농촌태양광 설비용량은 초과 보급되고 있는데, 에너지구조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농촌태양광의 주 수입원인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태양광 사업 목적인 농가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정부는 외지인·사업자 주도의 농촌태양광 사업에서 탈피하여 농가 수익성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인 참여모델 확산,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사업목적인 농가소득 증진과 관련된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사업 수행 시 농가소득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병행하고 농촌태양광 통계 구축 시 농가소득 실태 점검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입원인 SMP(전력판매수입) 및 REC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적용받는 농촌태양광의 비중이 높지 못한 실정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농촌태양광 설치를 통한 농지전용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적정 농지 유지·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제도개선 이후 산지태양광 설치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은 산지태양광 피해 예방·저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분석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발간일 2021. 3. 16.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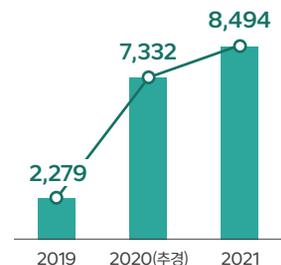
-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산업분야 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의료기기 개발, 신약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개인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도 높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의 재정사업도 확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여, 사업간 연계·조정, 성과분석, 표준화 촉진, 개인정보 침해 영향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정부는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 중소벤처기업 등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개인의료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인증 획득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정부는 정밀의료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요분석과 데이터 품질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구분	기관	주요 데이터
공공영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DB, 요양기관DB, 사망정보, 암정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명세서 일반정보, 진료내역, 원외처방전 내역 등
	국립암센터	암 환자 등록정보 등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감염DB 등
민간영역	국립암센터	암 진단·진료 정보, 생체데이터 등
	병원	병원진료기록, 생활·환경정보 등
	분석기업	유전체 정보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예산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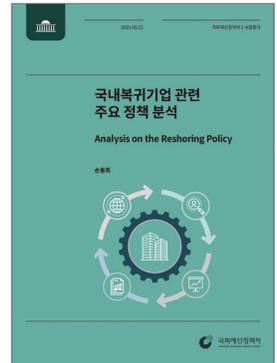
자료: 각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NABO 제작

재정사업 분석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발간일 2021. 5. 21.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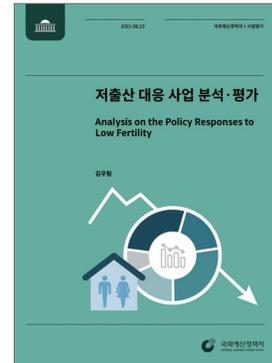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정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2013. 8. 제정)」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관련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복귀기업 수는 80여 개에 불과하는 등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국내복귀기업 관계 법령 및 정책 등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의 집행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첫째,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나 동반복귀 측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국내 복귀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중소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반복귀 및 투자·고용 계획 및 달성가능성,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반복귀에 따른 지원혜택을 조율하는 등 세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국내외 복귀사례, 국내복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복귀 지원정책과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정책간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산업기술·중소기업기술, 지자체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과 국내복귀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실무적인 측면에서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추가정보 수집·전달기능 강화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해외유사사례를 감안하여 국내복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여, 국내복귀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넷째,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래로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에서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의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분석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발간일 2021. 8. 23.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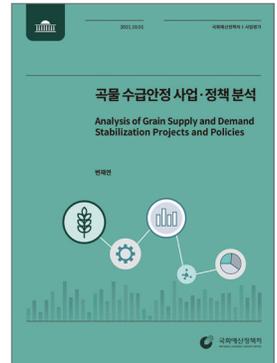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기준 2006년 1.0조원에서 2021년 42.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저출산 대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을 분석·평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핵심과제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저출산 대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고, 세부 예산의 구별이 어려워 관련이 없는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업이 연도별로 달라짐에 따라 저출산 예산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 범위를 출산·아동 양육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차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서 핵심 사업 중심으로 관련 사업에 꼬리표를 달아 관련 지원의 순 변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출산 대책의 수립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다. 이에 정책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행정부처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셋째,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시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인력과 보육·교육 환경이 달라 3~5세 아동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돌봄 수요에 따라 돌봄 제공 시간 등을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제공하는 모성보호급여는 사업체 규모와 산업 별로 수급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은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분석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

발 간 일 2021. 10. 1.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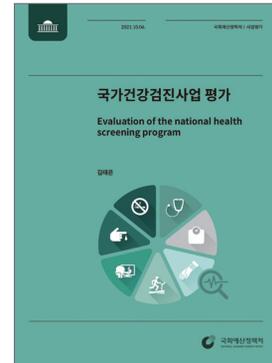
- 최근 주요 수출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0년 5월 91.0에서 2021년 8월 127.4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9년 21.0%로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곡물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곡물 수급 안정에 대한 인식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관련 상위계획에 따라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 국내 생산 확대 부문 ② 수입 안정화 부문 ③ 적정물량 비축 부문 ④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2017년 3.5조원에서 2021년 4.1조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수입이 많고 자급률이 낮은 밀·콩·옥수수 등 발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첫째, 밀·콩 등 발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은 국내외 가격차와 낮은 선호도·수익성, 미흡한 생산·유통기반 정비 등으로 인해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산 밀 등의 품질 수준, 소비 확대 및 수입곡물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력 소비품목을 명확히 하고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곡물 수입에 있어서 미국·브라질·호주 등 소수 곡물 수출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과 농업·무역에서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구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곡물 등 농업자원의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의 비중이 낮고 국내 소비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므로 국내반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밀·콩 등의 재고율이 FAO 권장 재고율(17~18%)보다 낮고 대부분 민간에서 보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 부문 주도로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비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료곡물 자급도가 낮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료용 곡물에 대한 비축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국내 사료가격 충격 완화를 위해 사료곡물의 공공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분석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발간일 2021. 1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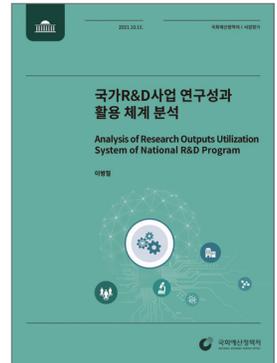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국가건강검진은 195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오랫동안 국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왔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업의 비효율성은 없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건강검진사업을 검진설계, 대상자 관리, 검진기관 관리, 사후관리,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첫째, 개인의 질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검진항목의 설계는 조기발견과 치료,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국가건강검진원칙과 차이가 있고,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고 검진주기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나 유병률이나 질환의심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생건강검진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검진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검진항목이나 검진주기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10년 동안 5회 이상 검진대상자 중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는 수검자는 약 8.6%로 조사되었고,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은 과반의 지자체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거가 불안정한 가출청소년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고,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정부는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부재로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인력기준(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 준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민간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 수검을 위해 연간 8,000억원 가량 지출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검사 실시, 방사능 과다 노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검진을 위해 민간건강검진의 실태를 파악하고, 검진항목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개인이 본인의 건강 위험을 파악하고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건강검진 외에 민간건강검진이나 개인이 추가한 검진항목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누적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패널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정한 건강검진비용, 의료비 절감 여부, 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청소년기 건강검진만 별도 운영체제로 추진하여 건강자료의 분절, 검진기관 선택의 한계, 행정비용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원화된 검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분석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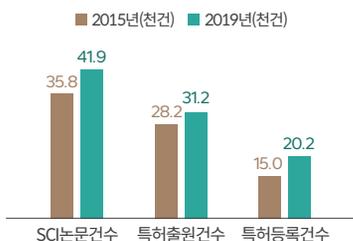


발간일 2021. 10. 15.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정부는 국가R&D사업의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R&D투자전략을 추격형 연구(Fast Follower)에서 선도형 연구(First Mover)로 전환하고, 고위험·혁신형R&D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다. 국가R&D사업이 선도형 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R&D종료 이후 연구성과에 대한 후속지원, 수요자 발굴, 시장창출, 규제개선 등의 체계적인 연구성과 활용 지원도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 창출지원·관리 및 이전·활용 체계에 관련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R&D기획 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략'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의 활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R&D단계별 전략적인 특허관리로 활용성 높은 R&D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전문성과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술거래기관과의 기술이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이전 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기관별로 다수의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용률과 만족도는 낮아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셋째, 정부는 연구성과의 부처간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부처간 기술사업화 협업을 강화 중이나, 시장수요기반의 사업화 지원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재정자립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연구성과 기반 창업 성과를 높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R&D사업 주요 연구성과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R&D사업 기술료 징수 성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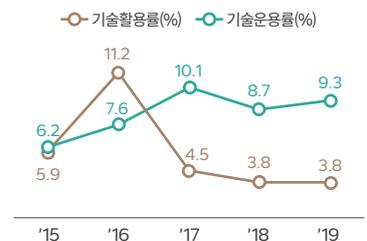
건당 기술료 징수액 = (당해연도) 전체 기술료 징수액 / (당해연도) 전체 기술료 징수 건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기관 기술활용률 및 기술운용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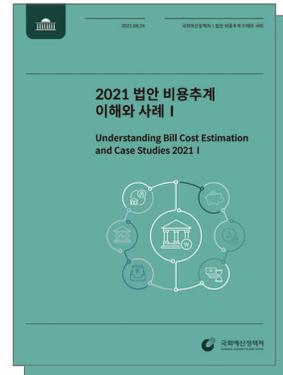
기술활용률 = 신규확보기술 중 기술이전 건수 / 신규확보 기술건수
기술운용률 = 기술이전계약포함 기술 건수 / 누적기술보유 건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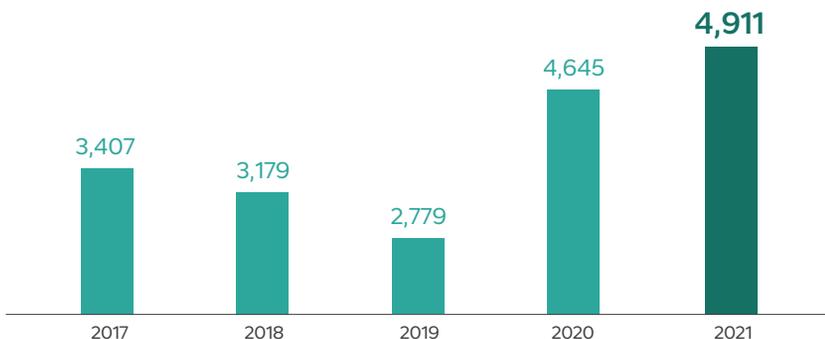


발간일 2021. 8. 24.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 총 2권으로 구성된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 II」는 1권은 법안비용추계 제도 전반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비용추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작성됐고, 2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제 작성한 주요 비용추계에 대한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성안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권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요구절차, 주요 통계, 관련 법령 등뿐만 아니라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국회 의원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도 포함하여 초선의원이나 신규 보좌직원이 비용추계 관련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 2권에서는 제21대 국회(2020. 5. 30. ~ 2021. 3. 31.)에서 의원 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에 대한 실제 비용추계 사례를 ‘지출법안’과 ‘수입법안’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 지출법안은 세부적으로 ① 보건·복지 ② 산업·농업·국토·교통 ③ 교육·과학·문화·여성가족 ④ 환경·노동 ⑤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⑥ 안전·행정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었고, 수입법안은 세부적으로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재산과세 ④ 소비과세 ⑤ 지방세제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최근 5년간 법안 비용추계 회답 실적

(단위: 건)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일 2021. 1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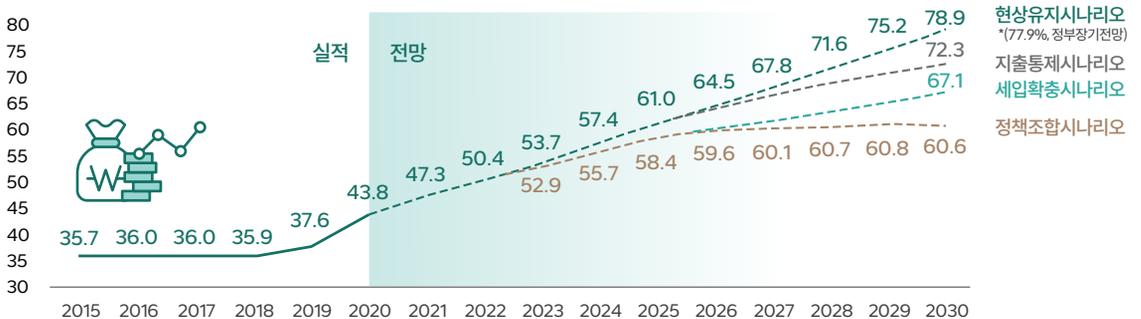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본 보고서는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전망 결과를 제시했다.
- 정부는 2021년 9월 3일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예산안의 총수입은 548.8조원, 총지출은 604.4조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수입은 66.2조원(13.7%), 총지출은 46.4조원(8.3%)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개년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재원배분 등을 담고 있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로 증가한다.
-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거시경제 상황, 재정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여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망치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7.3%에서 2030년 78.9%로 증가한다.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이 72.3%,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확충 시나리오에서는 67.1%, 정책조합 시나리오에서는 60.6%로 각각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단위: 경상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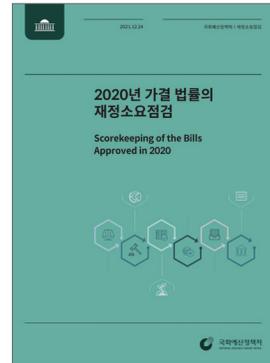
주: *는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2020. 9.) 중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2030년 국가채무 비율임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일 2021. 1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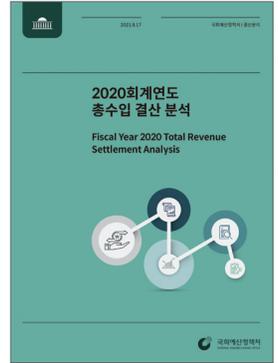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 본 보고서는 2020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법률 제·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했다.
- 2020년 가결된 1,039건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은 302건이며, 수입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62건,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25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한 139건의 법률을 제외한 163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실제 예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27건의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3,150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중 국가 수입은 연평균 1조 8,825억원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5,6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138건의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4,144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중 국가지출은 연평균 5조 6,503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7,64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수반법률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살펴보면, 109건의 법률이 수입과 지출관련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법률의 예산반영 분석 결과, 19건의 수입법률 제·개정에 따라 2021년 국세수입은 4조 7,198억원 감소하고, 국외수입은 1조 2,500억원 증가하여 총수입은 3조 4,69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법률 예산반영 분석 결과, 지출법률 90건 제·개정에 따라 31개 부처 예산에 2020년 2조 5,222억원, 2021년 4조 1,33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액의 3.2%(2020년), 8.2%(202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입법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입법에 따른 재정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세분석 및 연구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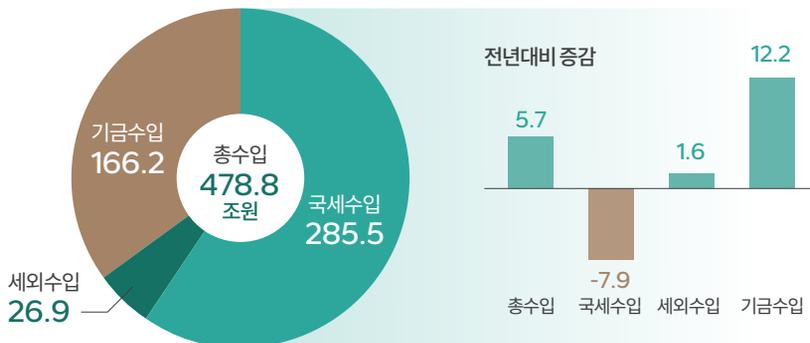
발간일 2021. 8. 17.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2020회계연도 총수입은 478.8조원으로, 2019년(473.1조원)에 비해 5.7조원(1.2%) 증가했고, 2020년 예산(470.7조원)을 8.1조원(1.7%) 상회했다. 2020년도 국세수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와 민간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조원(△2.7%) 감소했다. 반면 국세외수입은 최근까지 지속되던 감소세를 벗어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조원(6.3%),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2.2조원(7.9%) 증가하면서 2020회계연도 총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을 통해 금년의 재정운용 및 내년도 세입예산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됐다. 이를 위해 총수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했다. 국세수입 분석은 세목별 증감 원인, 2020년 국세수입 특징 및 자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자산과세 영향, 국세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국세외수입 분석은 항목별 분석과 8대 사회보험 결산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과소수납 문제 해결을 위한 세외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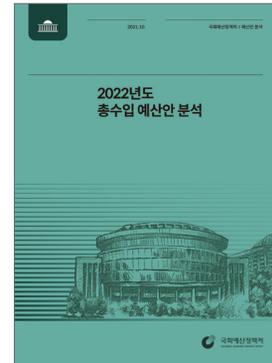


조세분석 및 연구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10.26.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올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포용적 경제회복과 양극화 대응 등 재정역할의 지속하는 가운데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점차 벗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 규모는 548.8조원으로 2021년 대비 34.2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세의 효과가 2022년도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 본 보고서는 2022년도 총수입을 전망하고, 2022년도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예산안을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와 세입기반에 미친 영향,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 강화방안, 국세 및 국세외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방안 등 총수입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다음으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정부의 세입예산 관련 국회 제출 첨부서류를 보다 폭넓게 살펴보았다.

2022년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1 NABO 전망 (A)	예산안 (B)	NABO 전망(C)	2022			
				전년대비 (C-A)		예산안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총수입	526.4	548.8	552.1	25.7	4.9	3.2	0.6
국세수입	323.0	338.6	340.9	17.9	5.5	2.3	0.7
국세외수입	203.3	210.2	211.1	7.8	3.8	1.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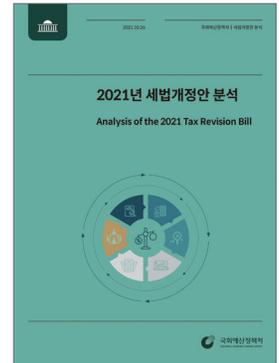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조세분석 및 연구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일 2021.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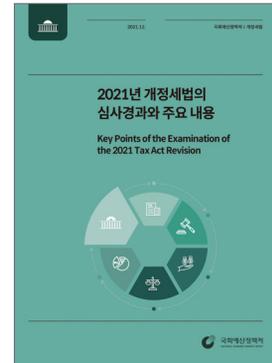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최근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조세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투자·소비 회복 지원, 서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에서도 투자 활성화,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에 관한 500여건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 현황,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상향 등에 대하여 세법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석 및 연구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발간일 2021. 12. 24.

발간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2021년 국회 세법심사는 240건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 7차례에 걸친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토대로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건의 법률안이 의결됐고, 12월 2일과 9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과정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와 2022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2022년 총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2021		2022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총수입	4,826,006	5,145,656	5,488,301	47,202	5,535,503
국세수입	2,827,425	3,142,816	3,386,490	47,349	3,433,839
세외수입	288,647	292,906	266,810	-6,085	260,725
기금수입	1,709,934	1,709,934	1,835,001	5,938	1,840,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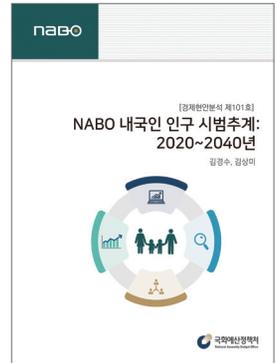
주: 2021년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NABO 제작성

경제현안 및 전망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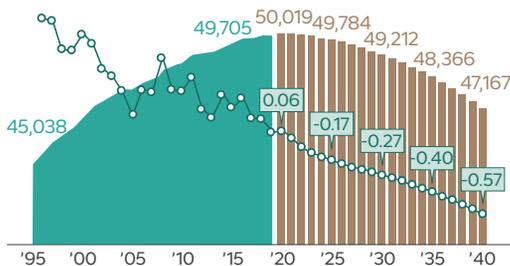
발간일 2021. 3. 31.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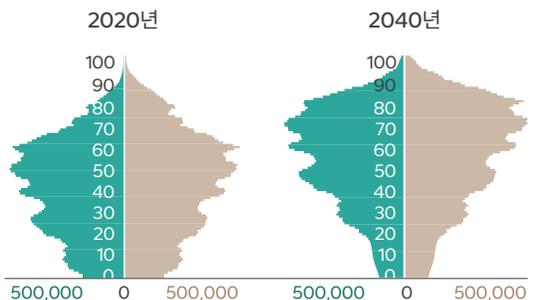
-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잠정)으로 3년 연속 1.0명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27.2만명으로 최초로 30만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미래와 재정·경제 정책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의 초저출산과 사망률 개선의 추이를 반영한 인구추계 모형을 개발하여 장래 20년 이내의 내국인 인구 규모를 시범적으로 추계했다.
- 합계출산율을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전망한 기본모형(시나리오 1)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명에서 2040년 4,71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20년 40~60대였으나, 2040년에는 60~80대로 나타나 인구피라미드가 호리병 모양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2020년 71.6%에서 2040년에는 56.8%로 하락하며,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도 2020년 15.9%에서 2040년 36.9%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출산율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인구를 전망했다. 지금의 합계출산율 하락 추이가 지속하여 2040년 0.53명을 기록하는 추세연장(시나리오 2), 2020년의 합계출산율 수준인 0.87명이 2040년까지 동일하게 지속되는 수준유지(시나리오 3),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합계출산율 하락추세를 이어가다가 2026년 출산율이 반등하여 2040년 1.7명에 이르는 반등(시나리오 4)을 가정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40년의 인구는 최소 4,717만명~4,901만명으로 추계되어 현재 수준(2020년 5,002만명)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이 반등하여 1.7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가정함에도 인구 감소세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인구 감소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추계: 2020~2040 ■ 내국인 인구(천명) ● 인구성장률(%)



인구피라미드

■ 남성(명) ■ 여성(명)



경제현안 및 전망

2021 경제전망

발간일 2021. 3. 31.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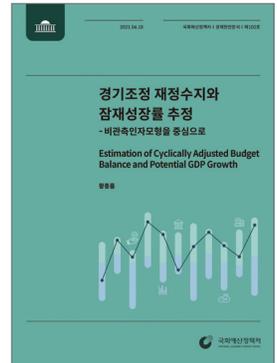
- 2021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1% 성장할 전망이다. 수출은 서비스수출의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재화수출이 해외수요확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수출호조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부문의 투자확대와 친환경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비IT부문의 신규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가계의 저축률 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 정부의 소비진작책 등으로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나겠으나, 가계의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더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완화되고 대면서비스 업종이 제한적인 회복을 보이며 전년 대비 8.3만명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요 및 공급측면 모두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며 1.3% 상승할 전망이다.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국내경제 회복세, 소비자물가 상승, 채권발행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양호한 국내 거시경제 기초여건, 외환시장 내 양호한 달러화 공급 지속 등으로 지난해 보다 낮은 1,130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올해 국내외 경제는 백신 보급과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는 비대면 경제활성화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전략으로서 우리 경제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술 혁신 등을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현안 및 전망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발간일 2021. 6. 18.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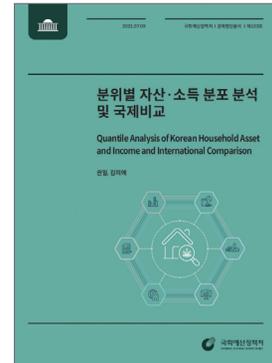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시계열 모형(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을 동시에 추정했다. 재정수지는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 자동안정화(automatic stabilization) 기능을 담당하는 경기변동적 재정수지와 이를 제외한 경기조정 재정수지로 나눌 수 있다.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한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을 때, 혹은 불황도 아니고 호황도 아닌 경기여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재정수지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인 재정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는 실질GDP 요인을 제외한 잠재GDP는 재정 중립적인 잠재GDP 수준으로 해석 가능하다.
- 전통적인 2단계 접근법에서는 1단계에서 잠재GDP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회귀분석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적 재정수지와 경기조정 재정수지로 분해한다. 여기서는 3변수(재정수지,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간의 이론적 관계를 고려한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GDP와 이에 상응하는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동시에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은 관측되지 않은 변수로 적용하는 추정방법론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정상적인 생산수준 및 재정여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경제성장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가운데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제고와 단기적 경기안정화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등의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목표 설정을 위한 유용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률 변수나 소득분배 지표 등을 추가하여 고용 상황 변동이나 소득분배의 변화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경제현안 및 전망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발간일 2021. 7. 9.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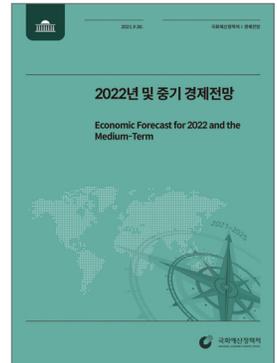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가계의 소득 분포나 빈곤율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가계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자산보유 분포를 같이 고려했다.
-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분포 현황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산 및 소득의 분배 수준을 평가했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격차는 높은 반면, 가계 자산의 격차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11~2019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가계의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에 비해 더 크고, 특히 최근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최근 지역별·분위별 가계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계 경제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과세시스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현안 및 전망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발 간 일 2021. 9. 30.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2022년 우리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강화되며 3.0% 성장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백신 접종 확대, 취업자 수 증가,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회복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IT 업종의 투자 지속, 신성장 및 친환경 연관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하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 R&D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총수출(물량)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가며, 총수입(물량)은 내수회복세 강화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중기 전망시계인 2021~2025년 기간 중 실질GDP 성장률은 이전 5년(2016~2020년) 기간 대비 설비투자와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연평균 2.8% 성장할 전망이다. 2021~2022년 기간 중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23~2025년 기간 중 코로나19 이전 성장경로로 접근할 전망이다.
- 2021~202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진했던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상승하고 자본의 기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며 연평균 2.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완만한 고용회복과 견실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경제현안 및 전망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발간일 2021. 12. 10.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환경 하에서 정확한 경제상황 파악은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GDP는 향후 경제동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이나 매분기 종료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표되고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분기 GDP 성장률을 미리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경제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분기자료를 추정하는 주성분분석 및 동태요인분석 모형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분기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했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변동성이 높은 2020년을 포함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코로나19가 예측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 분석결과 월별자료를 이용해 GDP를 예측한 주성분분석과 동태요인분석 모형이 분기자료를 이용해 GDP를 예측한 벤치마크 모형인 AR 모형에 비해 예측오차가 작아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기GDP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실적치 발표 전에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을 생성함으로써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현안 및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일 2021. 12. 29.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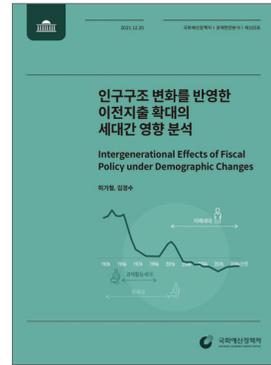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수준과 경제성장 경로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대응방향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에 대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했다.
- 1990년대까지는 OECD 국가의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의 경우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와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나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국가별 노동생산성 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1960~2019년 기간 동안의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핵심노동 연령대인 30~64세 인구 비중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p 상승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하락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8%p 상승하여 총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2000년 이전 시기에는 0.47~0.54%p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0.19~0.25%p에 그쳐 OECD 국가들의 고령화대응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OECD 국가들은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생산성 제고, 노동참여율 제고 등의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이주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주민 정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하락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자동화 과정에서 부문간, 연령별 균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가족정책, 양성평등 노동 정책 등의 추진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층의 노동참여 증대를 위해 정년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현안 및 전망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발간일 2021.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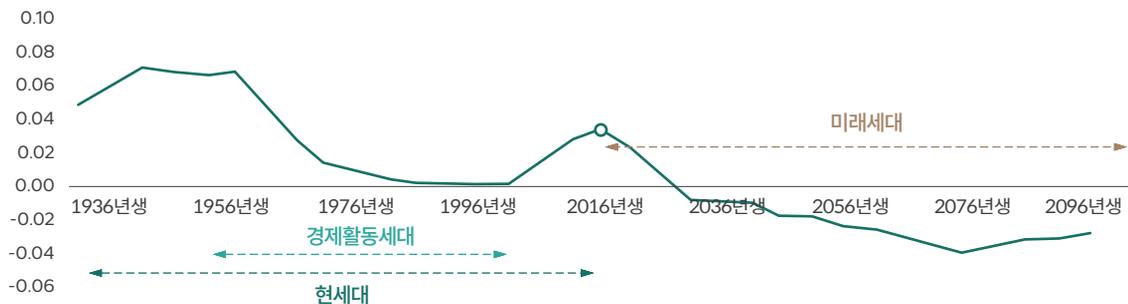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소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영향은 자원조달에 따른 비용과 세대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의 수혜와 자원 조달의 부담이 세대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 중 연령별 이전지출의 확대가 중장기 경제성장과 세대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분석결과, 이전지출 확대로 인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자원조달을 위한 국채의 상환시점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를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세대는 효용이 증가하지만, 미래세대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부정적 효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세대 내에서도 정부지출의 수혜가 높은 노년층과 유년층의 효용이 노동연령층의 효용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나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및 세대내에 차별화된 영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이 합계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져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미래세대의 효용감소는 상쇄될 수 있으며 현세대를 위한 이전지출이 미래세대의 효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재정지출의 확대는 미래세대에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세대간 효용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대별 총효용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 및 전망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발간일 2021. 12. 30.

발간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가 점진적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요국 경제현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팽창 등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발간됐다. 주요국의 경제·금융지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현안을 분석하여 글로벌 경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 일본 등 주요 3개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3개 신흥국의 경제·금융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정책적 대응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주요 경제이슈를 점검했다.
- 제 II 장에서는 실물환경과 금융환경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 및 이후의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장단기 흐름을 파악하고 그 방향을 살펴보았다. 실물환경으로는 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점검하고 금융환경으로는 신용위험,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원자재시장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 제 III, IV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 3개국(미국·일본·독일)과 주요 신흥국 3개국(중국·인도·브라질)의 실물경제지표를 점검하고 금융 가격변수, 유동성, 대외건전성 지표 등을 통해 금융환경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별 경제여건을, 신흥국의 경우 대내외 재정 및 거시 건전성을 추가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별 부채변화를 주요 현안으로 검토했다.
- 제 V 장에서는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관련 주요 현안(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정책대응, 인플레이션 리스크, 신흥국 금융불안정 리스크, 소득불평등 리스크)을 중심으로 국제비교 및 정량분석 등을 수행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규모의 격차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리스크를 점검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강화가 신흥국의 금융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으며, 마지막으로 통화량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정량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Chapter

IV

정기간행물

- NABO Focus
- NABO 재정동향&이슈
- NABO 추계&세제 이슈
- NABO 경제 · 산업동향&이슈
- 예산준추
- 예산정책연구

NABO Focus

수시로 발생하는 재정·경제 분야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구분	주제	발간부서
제29호	12대 분야별 예산의 최근 10년간 현황 및 국회심의 경과	예산분석총괄과
제30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사회비용추계과
제31호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인구전략분석과
제32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산업의 기술수준 국제 비교	산업자원분석과
제33호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세제분석2과
제34호	탄소세 논의 동향	세제분석1과
제35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예산분석총괄과
제36호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	거시경제분석과
제37호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용 및 향후 과제	세제분석2과
제38호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의 주요내용	예산분석총괄과
제39호	2022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예산분석총괄과
제40호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거시경제분석과

NABO 재정동향&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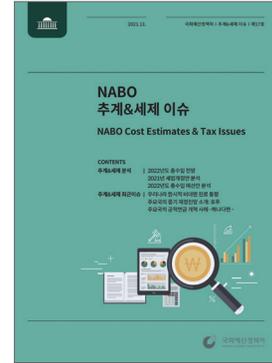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관련 동향과 이슈 제공



구분	주요내용	
제16호	주요 재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OECD 최근 경제전망 소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발표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지원계획 발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발표
	주요 재정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 및 접종 시작
제17호	주요 재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도 실행계획 발표
	주요 재정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급식 개선대책 추진현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제18호	주요 재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회 심사 결과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수립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방안 발표 202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결정
	주요 재정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발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NABO 추계&세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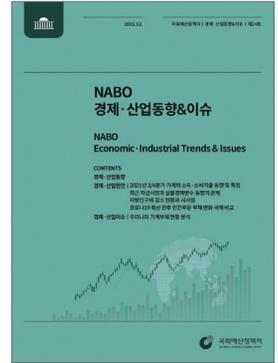
재정소요, 국세수입, 조세부담률 등 관련 동향과 이슈 제공



구분		주요내용
제14호	추계·세제 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0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추계·세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 간이과세제도 운영현황 및 국제비교 분석
	추계·세제 최근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 전망 2021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최근 국제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제15호	추계·세제 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 1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추계·세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황과 쟁점 - 부동산 보유세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2021년 주택분 보유세세 전망 및 요인분석
	추계·세제 최근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세 논의 동향 주요국의 실업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례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동향: 미국 CBO
제16호	추계·세제 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추계·세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추계·세제 최근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 이슈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동향
제17호	추계·세제 트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추계·세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도 총수입 전망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추계·세제 최근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주요국의 중기 재정전망 소개: 호주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캐나다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소비, 투자, 무역, 고용, 가계소득, 주택가격 등
관련 동향과 이슈 제공



구분		주요내용
제13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 점검 •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주요내용 • 2020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제14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업종별 주기변화 분석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원/달러 환율하락의 특징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5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 • 주요 경제정책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금리상승 요인과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흐름과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효과와 출생성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16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발행 확대와 시장이자율과의 관계 분석 • 바이든 행정부 기후·환경 정책 분석 • 최근 글로벌 부채 누적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유동성 증가가 부문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구분		주요내용
제17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추이와 시사점 • 최근 민간소비의 특징과 전망 • 중점전략기술의 기술수준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이동성에 미친 영향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변수가 국내 증권시장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양적완화정책을 중심으로
제18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과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 2021년 1/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 •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능력 추이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가격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제 비교
제19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 「EU 기후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제20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주가 및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및 주요 쟁점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변동요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제21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과 시사점 • 미국의 테이퍼링 여건 점검과 시사점 • 2021년 2/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분석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IV. 정기간행물

구분		주요내용
제22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 한국 기업의 ESG 위험 관리역량 국제비교 •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의 변화 분석 •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동향 분석
제23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동향과 시사점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교역 동향 • 최근 주요국 전기요금 동향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간 비용 격차가 당기순이익 분포에 미치는 영향
제24호	경제·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산업 및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3/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 최근 자금시장과 실물경제변수 동향의 관계 •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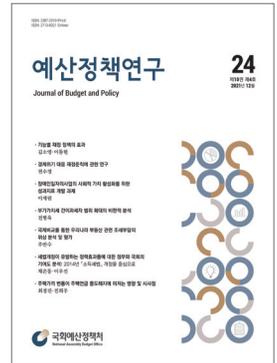
예산춘추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경제상식과 예·결산 심사동향 등을 종합한 NABO의 기관지



발간호	구분	주요내용
첫 번째 (통권 제61호)	특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도 예산안 등 국회 심의 주요 내용 2020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현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국제무역체제의 미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전망
	기획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및 최근 10년간 12대 분야별 예산현황 스페인 독립재정책임청(AIReF)
두 번째 (통권 제62호)	특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전망과 과제 출산율 제고 방안
	현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세계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기획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보건·복지·고용 분야 독일 안정위원회 및 독립자문위원회
세 번째 (통권 제63호)	특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심사 방향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현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든 정부 세제개편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발전 방향
	기획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국방 분야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네 번째 (통권 제64호)	특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내용
	현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기본법」의결에 따른 국내 에너지 정책 및 산업 변화 미국 Fed(연준)의 테이퍼링, 그 원인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기획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에너지 분야 이탈리아 의회예산처

예산정책연구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정책 논문을
심사·게재하는 NABO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구분	제목	저자
제10권 제1호 (통권 제21호)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	김건오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의 실증분석	서세욱
	국외전출세 제도의 이중과세조정 및 과세권확보 측면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전병욱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이한우
제10권 제2호 (통권 제22호)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양재진, 윤성원, 장우윤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심혜정
	교정적 기능 관점에서 차량별 외부성 차이를 고려한 적정 유류세 연구	이동규, 김빛마로
	자율주행 자동차 취득세 과세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서명자, 박훈
제10권 제3호 (통권 제23호)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옥동석, 정성호
	Exploring the Impacts of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Evidence from the U.S. State Governments	이겨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신우리, 송헌재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 비교분석	추석현, 전승훈
제10권 제4호 (통권 제24호)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 단위 분석	송윤아
	기능별 재정 정책의 효과	김소영, 이동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전수경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과제	이재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의 비판적 분석	전병욱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위상 분석 및 평가	주만수
	세법개정이 유발하는 정책효과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기여도 분석: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채은동, 이우진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최경진, 전희주

Chapter

V

법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회답

- 법안비용추계 현황
-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법안비용추계 현황

법안비용추계 개관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안비용추계 회답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출범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로 총 29,100건의 비용추계를 회답했다.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비용추계 회답이 59건에 그쳤으나, 2005년(제17대 국회)에는 168건을 국회의원에게 회답했으며, 2009년(제18대 국회)에는 588건, 2013년(제19대 국회)에는 866건을 회답하는 등 회답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3월 19일부터 의원 발의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고, 위원회 수정안·대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추계 회답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7년 3,407건, 2018년 3,179건, 2020년 4,645건, 2021년에는 4,911건의 회답 건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비용추계 회답 건수 (단위: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3,407	3,179	2,779	4,645	4,911

주: 연도별 회답실적은 비용추계 의뢰연도 기준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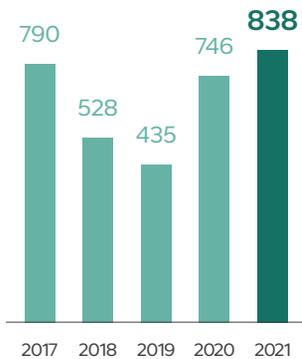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에 의하여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회답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국회에 산정정책처에서 회답한 조사·분석은 모두 838건이다.



실국별 조사·분석 회답 현황

(단위: 건)

● 예산분석실	● 추계세제분석실	● 경제분석국	합계
353	397	88	838



최근 5년간 조사·분석 회답 현황

(단위: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790	528	435	746	838

법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의 요구 및 회답 절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수행

요구 및 회답 절차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

- 오프라인: 요구서식 작성 후 FAX로 제출
- 온라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요구서식 다운로드

조사분석요구서
의안비용추계요구서
조사분석철회서
의안비용추계철회서



접수 및 분류 (정책총괄담당관실)

- 담당전화번호: 02-6788-4665
- 접수 FAX번호: 02-6788-3742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소관부서)

- 조사분석: 각 실국 소관 부서
- 비용추계: 추계세제분석실



요구 사항에 대한 회답 (소관부서)

- 전자공문,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이메일 회답

2021 NABO 연차보고서

발간일 2022년 9월
발행인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2070-3114
인 쇄 (주)명문기획(TEL 02-2079-9200~2)

ISBN 979-11-6799-079-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5-001582-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